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재정전략회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 출발점”

#### 문 대통령, 회의 모두발언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여, 국정과제 관리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 ▶ 정부, 국정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 이낙연 총리 “기간제 외 파견·용역도 포함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 개선”

####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응 지역지원대책도 마련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여 정부입법 전과정을 윈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한다.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방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통일성을 위해 공통 적용 필요 사항은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기준을 일괄 결정한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회사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위해 기관별로 노·사,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원, 상당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응 지원 대책은” 20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오전 정부에서 발표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진행 정무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관별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소요예산 반영, 관련 제도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로 7월 5일 군산지역을 방문하여 전북도청 군산시청 면담, 기업간담회 개최, 관련업체 및 지역사관방 등 현장 실사를 통해 지역여건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응 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책은 선박조선 수요발굴 및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으로 구성된다. (관련기사 9면)

우선 선박조선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시 보조금 지급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규 선박 건조발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으로 정부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전북 공기업·출연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

### 도, 새로운 보수체계 마련키로

전북도는 산하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기관별로 새로운 보수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19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기재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고용부)이라는 공공기관관련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 기획조정실장 긴급회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한 기관의견을 수렴하고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성 저하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관련 정부정책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출연기관은 제외되어 있으나, 전북도에서는 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추진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현재 전북도 산하에는 7개 공기업 및 출연기관이 업무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기관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예코융합기술원, 생활산업진흥원, 인재육성재단, 문화관광재단이다.

도는 앞으로 기관별로 노사합의 또는 구성원 동의절차 등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방향을 확정하고 기관별로 임금체계 변경 안을 마련해 도 회의 및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향후 5년 간 국가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국가 재정전략회의에 대해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가 발전을 위해 재정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 치열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또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저성장 양극화의 조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중심 경제이자 국민성장”이라며 “그 핵심은 일자리로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도내 11개 대학 교류 협정식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북지역 11개 대학이 뚝뚝 뚝뚝 했다.

20일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 소속 도내 11개 대학은 전북대학교에서 ‘교육·연구·학술 분야 교류협정식’을 열었다.

이날 협정식을 체결한 대학은 군산대와 서남대·예수대·예원예술대·우석대·원광대·전북대·전주교대·전주대·한일장신대·호원대 등이다.

이번 협정으로 11개 대학은 ▲교수·연구 인력의 교류 ▲학생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비교과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술 공동연구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학술자료·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기자재·시설물의 공동 활용 등을 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www.namwon.go.kr

광한루원, 구룡계곡, 뱀사골계곡,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월매를 사랑한 놀부, 남원에촌

맛과 멋이 특별한 남원의 여름

지리산 물소리에 몸과 마음이 시원~ 우리 가락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남원시